

# “먹튀 방지”... 우리사주·스톡옵션 퇴사 방지책 ‘고심’

〈상장 후 권리 행사 후 퇴직〉

예비상장사, 리스크 대비 제도 고민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불가피  
이탈 방지 위한 성과보장제도 필요  
현금결제 성과연계형 등 대안 거론

예비 상장사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우리사주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주식보장제도를 고민 중이다.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직원들이 권리 행사 후 바로 퇴직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전보다 까다로운 상장 심사에 나섰다. SK바이오팜 일부 직원들이 우리사주 차익 현금화를 위해 퇴사한 것이 경종을 울린 모양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그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일종의 성과급으로 볼 수 있다.

상장사들은 자사 혹은 관계사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지만 비상장사들은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외

	주식회사	상장회사	벤처기업
부여대상	당해회사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관계회사 임직원 (30% 이상 출자 & 최대 출자자인 외국법인 등)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등)
부여불가	-10% 이상 주주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당해회사 및 관계회사 임원 제외)	-

부 전문가에게도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상장 단계의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코스닥상장사 B사는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여하고, 그때마다 행사 시기를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며 권리 행사 기간을 늘려가는 식”이라며 “주가 급등 후 퇴사를 막기 위한 교육책”이라고 말했다.

우리사주는 보호예수 기간이 상장 후 1년으로 통일돼 있지만 스톡옵션의

경우 제도적으로 설정해 놓은 기간은 없다. 이에 기업들이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핵심인력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사주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이슈가 시장의 화두인 만큼 ‘핵심인력과 보유기술 유출에 따른 위험에 관한 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예비 상장사들은 회계적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핵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스톡옵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더

더욱 그렇다. 굵직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나기 전까지 큰 수익을 내기 힘든 만큼 대규모 인건비를 책정할 현금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특례상장 한 58개사 중 88% 수준인 51개사가 스톡옵션을 활용했다. 이 중 85%가 제약·바이오 업종이었다.

코넥스에 상장한 한 바이오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는 “바이오중소벤처기업은 인력 유치 경쟁이 심하다. 핵심인력이 이탈할 경우 제품개발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급여와 처우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소규모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다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현금 흐름표에 주식보상비용이 계상되는 것은 부담 요소로 꼽힌다. 이 CFO는 “주식보상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실질 현금흐름과는 상관없이 장부상 적자를 기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거액 스톡옵션 회계처리 문제가 지목됐다.

최근 IPO를 마친 상장사 관계자는 “기존에 냈던 것에서 추가로 보완 서류를 요구받았다”며 “스톡옵션 행사로 매수한 가격 대비 공모가 하단가격 금액도 따로 적어내라고 했다”고 귀띔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도제한부 주식, 주식결제 성과연계형 주식, 현금결제 성과연계형 등도 그 대안으로 지목된다. 이중 양도제한부 주식은 임직원이 중도 퇴직할 경우 회사에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스톡옵션의 일종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점에서 행사기간 안에 일정 수량을 사야 하는 일반적인 인센티브 스톡옵션과는 차이가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oul.co.kr

## 코로나 피해 야외로... 오피스 지역 이용 감소 “신용대출 용도분석 어려워 핀셋형 규제 난감”

###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0

코로나19 시대 모빌리티 변화 소개  
카카오T 블루, 단거리 운행 증가 기여  
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 요금 추천

카카오모빌리티가 첨단기술로 탑승자의 불편이 해소된 성과와 코로나19 시대 모빌리티의 변화를 소개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쇼핑물, 영화관 등 실내 밀집 지역을 피해 야외 관광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택근무가 활발한 지역에선 이동량이 감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이동 빅데이터를 분석한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0’을 14일 발간했다.

4회차를 맞은 이번 리포트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집중해왔던 ‘데이터 중심의 이동 혁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데이터가 이용자들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로 이어지는 과정과 원리를 조명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이동 트렌드 변화도 함께 분석했다.

◆카카오 T 택시, 배차 실패 많은 단거리 이동 운행 여건 개선

모빌리티 기술에 고품질 데이터가 접목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특화된 택시 서비스 도입 후 단거리 운행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우선 승차거부의 주 대상인 단거리 이동에 대한 운행이 늘어나 이용자 불편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45%였던 단거리 운행 비율이 2020년 상반기에는 5% 증가한 50%를 기록했다.

하지만 단거리 배차 실패로 크게 불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이동 빅데이터를 분석한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0’을 14일 발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편을 겪는 서울 지역의 경우, 5km 미만 단거리에 대해 올해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 일반 택시는 기사별 수행한 운행완료 수 중 단거리 운행 비율이 27%였다.

반면에 카카오 T 블루는 31%로, 카카오 T 블루의 기사별 단거리 운행 비율이 4% 더 높게 나타나 서울지역 단거리 운행 여건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퇴근, 심야시간대의 택시 초과 수요 현상은 여전했지만 특화된 택시 서비스가 빠른 귀가를 돕는 대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 등 승차난이 심각한 4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호출과 카카오 T 블루와 같은 특화된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택시를 잡기 힘든 시간대에 서비스 이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카카오 T 대리에 입혀진 인공지능, AI 추천요금이 빠른 귀가 도와

/구서윤 기자 yuni2514@

카카오 T 대리에 적용된 데이터 기술은 바로 ‘AI 추천요금’이다. 머신러닝을 통해 5년간의 실제 이용 요금, 호출 위치, 시간, 거리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요금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AI 추천요금 도입 이후인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간 기사 배정 시간은 22% 단축되고, 기사 배정 확률은 21%가량 증가했다.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귀갓길이 더 빨라질 수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진 이동생활 변화 특징 조망

이번 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트렌드 변화에도 주목했다. 카카오내비 길안내 기준으로 복합 쇼핑물, 영화관 등 실내 장소로의 이동은 최대 54.5% 감소했고, 분당구, 강남구와 같은 오피스 지역은 재택근무의 영향을 받아 이용률이 10~20% 감소했다. 반면, 구로, 시흥 등 공단이 밀집된 지역은 0~10% 이내의 감소세를 보였다.

1인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카카오 T 바이크 이용도 늘어나, 2020년 4~7월 간 전년 대비 카카오 T 바이크 이용자 수는 35%, 기기당 이용횟수는 27% 증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금선 대표는 “2017년 첫 리포트를 발간한 이래 모빌리티 데이터가 이용자들의 이동 생활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변화를 주는 지 그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꾸준히 조명해왔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요즘, 모빌리티 데이터가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이동의 표준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면 ‘신용대출 열흘만에 1조’서 계속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한해 대출용도를 확인하던 것도 기간을 3개월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장부법대응반”을 통해 사후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명확한 용도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원하는 핀셋형 규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용도 제한이 없어 용도에 관한 통계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들도 대출이자만 제대로 납입되면 크게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주택자금이든 주식투자용도든 사용될 수 있다”고 말

했다. DSR 등을 활용해 주택자금이 사용되는 신용대출을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 도려내는 작업은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이 같은 방안은 신용대출을 생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비율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SR비율을 축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인과 취약계층이 신용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오히려 이 같은 방안으로 피해를 보는 분은 중소기업인과 취약계층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실태를 더 파악한 뒤 대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코로나 영향 언택트 간편결제·송금 ‘썰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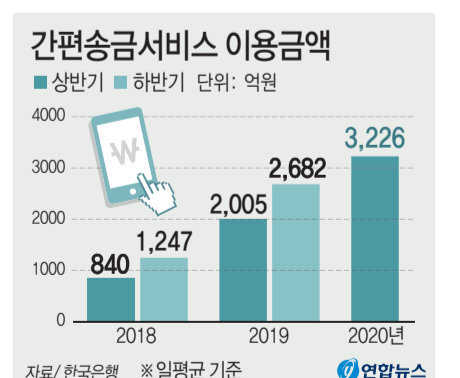
간편송금 일평균 이용실적 3226억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카드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731만건, 2139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8.0%, 12.1%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291만건, 3226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4.7%, 20.3% 늘었다. 시장 점유율이 높



은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송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금융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 확대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이용실적(일평균) 역시 1782만건, 6769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32.0%, 15.3% 증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